

‘호남 정치’ 정권 재창출 전략 중심부 부상 기대감

후선대위 광주·전남 인사 대거 중용

정책·정무·조직에 지역 의원 포진
실무중심 배치로 당내 입지 확대
총선 앞두고 지역정치 성장 주목
“기회이자 시험대…내부조율 관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꾸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광주·전남 출신 정치인과 전문가들이 대거 중용되면서, 그동안 주변에 머물렀던 호남 정치가 정권 재창출 전략의 중심부로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지역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이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격상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최근 불거졌던 ‘호남 홀대론’과 4·2 재보궐선거 패배에 따른 당 내부의 자성이 인사에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명단에 따르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총괄선대위원장단에 포함됐다. 광주 출신인 정 전 청장은 전남여고를 졸업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진두지휘하며 전국적 신뢰를 쌓은 인물이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박지원의원(해남·완도·진도)이 이름을 올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불렸던 박 의원은 야권 대표 원로 정치인으로, 선대위의 중량감과 외연 확장을 책임진다. 전국 선거조직을 조율하는 핵심 직책으로, 지역과 중앙을 연결하는 전략 조율 및 실무를

총괄하는 총괄조직본부장은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맡았다.

또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실 수행실장, 그의 배우자 임선숙 전 최고위원은 후보 배우자실장을 맡았다.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장, 사촌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서민·중산층경제살리기위원장을 맡았다.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K-이니셔티브위원장,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보육위원장 겸 골목상황부실장,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광주시당위원장을 담당한다. 전남에서는 주철현 의원(여수갑)이 도당위원장, 조계원 의원(여수을)은 체육위원장,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꿈사니즘위원장, 김원이(목포) 의원은 미래전략산업기획위원장,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유세 부분본부장으로 각각 활동한다.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조직본부부분부장,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은 여성본부 부분부장, 서미화(비례대표) 의원은 장애인본부장,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농어민본부장을 맡았다. 조인철(광주 서구갑) 의원은 K-통합사회위원장,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신속대응단 부단장,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은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으로 기용됐다.

보성 출신의 이해식 의원은 후보 비서실장, 목포 출신의 황희 의원은 주거복지위원장, 순천 출신 김태년 의원은 편사니즘위원장, 나주 출신 박선원 의원은 전략

본부 부분부장으로 캠프 실무 역할을 맡는다. 고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호남에서 중량감 있는 역할을 해왔던 박광태 전 광주시장과 정동채 전 의원은 고문단에 합류했다.

이번 인선은 단순한 지역 안배를 넘어 정책·정무·조직의 중심을 광주·전남 인사들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호남이 민주당 정권 재창출의 ‘핵심 파트너’로 대우받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내부에서 ‘호남 홀대론’과 더불어 이번 4·2재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패배를 맛 본 것에 대해 자성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당에서는 사실상 작년 영광 재보궐선거때부터 공천과 후보자 인선 등 전반적으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도 이러한 호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번 선대위 구성에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선대위 인선은 호남에 ‘호재’로 작용한다. 오랜 기간 중앙정치의 변방에 머물렀던 호남 정치가 중심 무대로 복귀한 데 더해, 지역 조선·재선 의원들이 주요 직책을 맡으면서 당내 입지와 정치적 역량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지역 현안을 중앙에 더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것은 물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쟁력 있는 호남 출신 정치인을 발굴·육성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기대가 커진 만큼, 그에 따른 무

민주당 중앙선대위 광주·전남 출신 인사		
이름	지역구·출신지	선대위 직책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광주 출신	총괄선대위원장
박지원	전남 해남·완도·진도	공동선대위원장 광주·전남 총괄
신정훈	전남 나주·화순	총괄조직본부장
정진욱	광주 동남갑	상임총괄선대위원장실 수행실장
임선숙	전 최고위원	후보배우자실장
안도걸	광주 동남을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광주 출신	서민·중산층경제살리기위원장
민형배	광주 광산을	K-이니셔티브위원장
전진숙	광주 북구을	보육위원장 겸 골목상황부실장
양부남	광주 서구을	광주시당위원장
주철현	전남 여수갑	전남도당위원장
조계원	전남 여수을	체육위원장
이개호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꿈사니즘위원장
김원이	전남 목포	미래전략산업기획위원장
조인철	광주 서구갑	K-통합사회위원장
문금주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조직본부 부분부장
김문수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유세 부분부장
권향엽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여성본부 부분부장
서미화	전남 무안 출신·비례대표	장애인본부장
서삼석	전남 영암·무안·신안	농어민본부장
정준호	광주 북구갑	신속대응단 부단장
박균택	광주 광산갑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
이해식	전남 보성 출신	후보 비서실장
황희	전남 목포 출신	주거복지위원장
김태년	전남 순천 출신	편사니즘위원장
박선원	전남 나주 출신	전략본부 부분부장
박광태	전 광주시장	선대위 고문
정동채	전 국회의원	선대위 고문

게도 만만치 않다. 다양한 계파와 노선이 뒤섞인 만큼 내부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어서다. 결과에 따라 조직 기여도와 정치

적 무게가 함께 평가되는 만큼, 이번 선대위 내 호남의 전면 배치는 지역 정치의 기회이자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오지현 기자**

“조기 대선, 선관위 공정성·신뢰 회복 시험대”

황윤선 광주시 선관위 상임위원

부정선거 방지…신뢰 회복에 최선
공정선거참관단 도입 투명성 강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른 헌정 사상 초유의 ‘궤외 선거’다. 짧은 준비 기간과 뜨거운 국민적 관심 속에서 선거관리기관의 책임은 어느 때보다 무겁다.

황윤선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전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선관위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른 선거”라며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에서는 5개 구선관위가 총 96개 사전투표소와 357개 본투표소를 운영한다. 사전투표에는 약 1700명, 본투표에는 약 3400명의 인력이 그리고 개표에는 1800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황 위원은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통신 기능이 없고, 개표는 정당 참관인과 수백 명의 인력이 실시간 감시하기 때문에 조작은 불가능하다”며 “통합선거인명부에도 사전투표 여부와 시각이 기록돼 이중투표는 원천 차단된다”고 일축했다.

이번 대선부터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시군구 단위로만 제공되던 사전투표 통계가, 각 투표소별·시간대별로 관내·관외 투표자 수까지 실시간 공개된다. 또 정치적



황윤선 광주광역시 선관위 상임위원이 지난달 30일 전남일보와 6·3조기대선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 제공

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정선거참관단’이 처음 운영돼 후보자 등록부터 개표소 이송까지 전 과정을 직접 참관하고, 관련 영상도 공개된다.

선관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허위사실 유포, 여론조작 사외국, 공무원 개입,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광주시에서는 공정선거지원단 50명,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20명이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 감시 중이다.

황 상임위원은 “일부 실책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린 것은 사실이지만, 결자해지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6월 3일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품격을 결정짓는다. 모두 꼭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성현 기자

민주·국힘, 13조8000억 규모 추경안 처리

산불대응·내수부진 극복 등 지원
지역화폐 4천억 반영·특경비 복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 내수 부진 극복, 첨단 전략산업 발전 등을 위해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수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12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韓, 권한대행 사퇴 대국민담화…사실상 대선출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정부안 대비 증액된 항목별로 보면 이번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규 반영한 1조원에서 6000억원 줄인 4000억원으로 합의됐다.

지난 연말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감사원 특수업무경비가 복원됐다.

검찰 특경비는 507억원이, 감사원 특경비는 45억원이 각각 복원됐다.

산불 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이 약 2000억원 증액됐고,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도 1157억원 증액됐다.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도 300억원 증액됐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약 8000억원 증액됐다. **김선욱 기자**

오늘 국회서 출마 선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는데 많은 분이 동의하실 줄 안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

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총리직을 사퇴한 데 이어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김선욱 기자